

데스크 시국



채희종 편집부국장·사회부장

‘5·18’이 불혹을 맞았다. 40년이 된 5·18을 모르는 이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일부 극우 세력과 정치인들은 아직도 5·18을 폭력사태로, 북한군 개입에 의한 폭동으로 폄훼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유튜브 등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 5·18항쟁을 왜곡하는 가짜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다.

맞대응할 가치를 느끼지는 못하지만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속상하고 분한 마음에, 또 흑사나 하는 염려에 5·18에 대해 건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누구보다 5·18을 잘 알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막상 몇 줄짜리 개념마저도 기록에 의존하지 않고는 정리가 어려웠다. 부끄러울 따름이다.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27일 새벽까지 열흘 동안,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당시 신군부의 집압에 맞서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이 ‘비상계엄 철폐’ 등을 외치며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한 사

불혹(不惑)의 5·18에게

건이다. 특히 광주 시민들은 항쟁 기간 중 5월 22일~26일 닷새 동안, 자력으로 계엄군을 물리쳤음에도 약탈이나 방화 등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키지 않은 세계 민주주의 운동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자치 공동체를 실현했다. 5·18은 도덕적 질서가 유지된 항쟁이라는 점에서 아시아와 제3세계 민주주의 운동의 교과서이자 정신적인 지표로 꼽힌다.

진상 규명 마지막 기회

계엄군에 의해 진압당한 이후 5·18은 한때 ‘폭동’으로 매도당했으나 진상 규명을 위한 끈질긴 투쟁으로 1996년에는 국가가 기념하는 민주화운동으로, 2001년에는 피해자가 민주화 유공자로, 5·18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돼 그 명예를 온전히 회복했다. 5·18은 한국 민주주의의 분수령이 되는 1987년 6월 항쟁의 동력으로서 작용했다. 이제 5·18은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민들에게 귀중한 경험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우리에게겐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한 위대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광주와 대한민국의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5·18은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간단한 사건이다. 이미 역사적, 정치적,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5·18은 12·12군사반란과 불법적인 계엄에 맞선 민중 항쟁이다. 그 과정에 권력욕에 미친 정치군인들이 가장 격렬하게 저항한 광주 시민을 본보기 삼아 제압하기 위해 벌인 학살이다. 300여 명의 목숨과 4000명이 피 흘린 대가로 오늘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이다.

살아남은 자들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심연처럼 깊은 좌절과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무참하게 숨진 가족과 아들딸이 폭도도 둔갑하고, 북한군의 사주를 받았다는 망언이 되풀이될 때마다 그날의 악몽에 시달린다.

5·18 진상 규명은 1988년 국회 청문회를 시작으로, 1995년 특별수사와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 등을 통해 수차례 이뤄졌다. 헬기 사격 등 숨겨졌던 진실이 단편적으로 밝혀지기는 했지만 국가 차원의 최종 보고서는 발간되지 않았다. 결국 발표 명령자와 암매장은 아직도 밝혀지지 못한 미완의 과제이다.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3년의 기회가 주어졌다. 올 초 출범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3년 임기로 5·18 당시 발표 명령자와 역사 왜곡, 민간인 학살 및 암매장 등과 관련한 조사에 들어간다. 5·18진상조사위가 3년의 활동을 마치고 진상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국가의 승인을 받을 경우, 국가보고서는

최종 역사 기록으로 확정된다.

34명의 조사관들이 주축이 돼 지난 40년간 묻히다 못해 왜곡된 진실을 3년 만에 밝혀내는 일은 무척 고단한 과정이 될 것이다. 진상 규명의 실무를 담당할 조사관을 22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고 한다. 당초 60세 이하였던 지원 자격의 연령 제한이 풀리면서 오랜 세월 5·18을 연구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길이 열렸다.

전문 연구자 참여 절실

그러나 최근 들어 조사관 채용을 놓고 5·18 연구자와 시민사회 활동가들 사이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러 기관이나 관련단체에서 활동하던 비전문가나 세월호 조사와 과거사조사위 활동 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던 인사들이 5·18조사관 응모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이다. 역사적 소신을 가진 우수한 연구자나 전문인들의 지원이 절실한 대목이다. 진상조사위는 검찰 수사 의뢰와 국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수도 있는 만큼 모든 권한을 행사해 5·18의 숙원 해결에 전력해 주길 바란다.

이번 설 연휴에는 국립5·18민주묘지에 한번 다녀오는 건 어떤가. 아마 가신 임들이 웃으면서 맞아 주실 것 같다.

/chaek@kwangju.co.kr

은편칼럼

4·15 총선, 누가 주인인가?

통해서라도 국회 임성이 장땡이다. 이번 풍토 때문에 대선(多選) 의원들은 존경받는 원로라기보다 우리 정치의 모든 병폐를 두루 섭렵한 퇴출 대상으로 꼽히기 일쑤다.

선거철만 되면 여기저기서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문종이나 집안을 중심으로 편을 가르려는 비합리적인 모습 태도가 불쑥불쑥 고개를 내민다. 또한 후보자 간 토론의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상대방의 비리나 들춰내려는 폭로전이 기승을 부리게 된다. 상대방을 꺾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듯하다. ‘제 흥 많이 가진 자가 남의 흥 잘 본다’는 말은 선거판에 적용해 볼 만한 말이 아닐까 싶다.

유럽의 경우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자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면 공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웃으로부터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 이는 대부분이 개신교 국가인 유럽 선진국들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공공 기관에서 내가 한 말은 그대로 믿어 준다다고 한다. 바보가 아

닌가 싫을 정도로 상대방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 주는 것, 그것은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다. 믿어 주었는데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범죄가 된다. 그 거짓말에 대한 응징은 가혹하다. 이것이 한 사회가 신뢰를 쌓아가는 메커니즘이다.

그에 반해 우리는 어떤가. 지위가 높을수록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 같다. 선진국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부패의 관성이 곳곳에 남아있음을 본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의 지도층이 저지른 이권 개입이나 부정 청탁 의혹 사건들을 수없이 보아 왔다.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부터 염치를 모르니 사람 사는 도리가 제대로 설 리가 없다.

이쁜인가. 생활 주변 곳곳에서 공공의식의 부족 역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누구나 KTX 열차 안에서 독서를 방해하는 전화 통화에 신경을 곤두세웠던 경험이었을 것이다. 휴대 전화를 볼고 30분씩 통화하는 사람들은 아줌마, 아저씨, 아가씨 구분이 없다. 이제 우리도 ‘내가 먼저’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국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선진국의 기본 틀을 세우려면 정치판

부터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젊은 층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유럽 국가들의 국회의원처럼 비서도 없이 평범한 시민의 대표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솔선수범하고 봉사하는 정신이 우리에게 요구된 이야기일 뿐인가? 민주적 성식이 통하지 않는 정당 정치를 바로 잡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시급한 민생 법안을 뒷전으로 하고 썸밭질만 하는 ‘동물 국회’가 된 것도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다. 루소의 지적처럼 ‘국민은 하루 주인 노릇하고 4년 내내 종노릇’해서는 안 될 일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우리의 심부름꾼을 뽑는 기준은 말보다 그가 살아온 길을 먼저 살펴야 한다. 자신을 위해 살았는가, 남을 위해 살았는가, 자기의 무를 다했는가, 봉사와 겸손의 자세를 지녔는가, 미래의 비전이 뚜렷한가,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투표는 충알보다 강하다’고 한다. 21대 총선에서 그들만의 정치 놀음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누가 주인인가를 확실히 보여 주어야 한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이 해야 할 일

정을 주장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착한 심성에 동정심을 갖기도 했던 것이다. 조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조사 대상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뿐만 아니라 전 가족이 어려워하고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그러한 불편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말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필자는 안타깝게 바라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이란 신속 처리 안건으로 규정해 통과시킴으로써 기존 수사 체계상 겪어야 했던 불편해소가 눈앞에 다가왔다. 언론과 정치권에 서는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특히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2월 대통령도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언급을 할

필요하다”며 수사 제도 개혁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일반 국민들도 적잖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선 “과연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어도 뒤탈이 없겠냐”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또한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질 정도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도덕성 등 역량을 제대로 갖춰야 하는 비판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경찰이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형 범죄를 철저히 공정하게 수사하려면 경찰의 중립성 확보와 수사 종결권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경찰은 이제껏 해온 ‘수사 주체가 누구냐’의 권한 다툼보다는 ‘누가 국민의 편에서 보다 친절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제 두 기관은 향후 수사권 행사를 함께 있어 우리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재야 법조인들의 입장에서 “경찰이 좀 더 책임성 있게 수사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며 “수사 심사판제 외에도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건 당사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며 수사 제도 개혁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일반 국민들도 적잖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선 “과연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어도 뒤탈이 없겠냐”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또한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질 정도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도덕성 등 역량을 제대로 갖춰야 하는 비판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경찰이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형 범죄를 철저히 공정하게 수사하려면 경찰의 중립성 확보와 수사 종결권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경찰은 이제껏 해온 ‘수사 주체가 누구냐’의 권한 다툼보다는 ‘누가 국민의 편에서 보다 친절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제 두 기관은 향후 수사권 행사를 함께 있어 우리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社說

‘총선 공약’ 지역 현안 해결 절호의 기회다

총선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각 정당의 정책 공약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공약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어 시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총선공약기획단을 구성하고 벤처 4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유니콘 기업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자유한국당도 같은 날, 간이과세 자 적용 기준 매출액을 현행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공약을 내놓았다.

이처럼 여야 각 정당이 전국을 겨냥한 정책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광주·전남 공약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의 공약 제시와 당내 경선이 마무리되는 2월 말~3월 초쯤 지역별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뿌리로 하는 소수 야당들도 제3지대 통합 등 정계 개편의 와중

에서 지역 공약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광주·전남에는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이전 대상 지자체의 반발 속에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나 한전 공대 설립도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의 인공지능(AI) 산업과 광주형 일자리, 전남의 ‘블루이코노미’ 등도 중앙 정부 지원 없이는 성공을 기약할 수 없다.

따라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지역의 대형 현안과 숙원 사업을 선거이슈로 제시해 해법을 찾고 미래 비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총선은 지지부진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다. 그런 만큼 국비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지역 사업을 여야와 총선 주자들의 공약에 적극 반영시켜 시행을 앞당기고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광주 학원가엔 왜 ‘어린이보호구역’이 없나

학교 앞에는 있고 학원 앞에는 없는 것이 광주에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할 수도 있다.

이는 모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 그래서 대부분 초등학교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학원 앞이라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의 경우 초등학교가 많이 다니는 학원 밀집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특히 감사원마저도 행정자치부를 통해 광주시에 “어린이 보행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검토할 것”을 통보했는데도 광주시는 “나 몰라라”하고 있다 한다. 왜 그럴까? 이유는 단 하나. “주변 상인 등의 민원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광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초등학교(100인 이상)만 192곳에 이르지만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에 비해 서울(3곳), 인천(13곳), 부산(3곳), 대구(1곳) 등 전국의 대도시에는 학원 주변 20여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광주시 또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해 봤지만, 주변 상인 등의 민원 발생까지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물론 상에서는 당장 생계가 걱정인 상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어린이 안전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학원가는 아이들의 활동 범위가 더 넓고 교통사고 위험도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를 통해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한 힘만 있으면 족하고,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한 부력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며 문화를 강조했다. 김구 선생이 강조한 한국 문화의 힘은 21세기 들어 더욱 강해지고 있다. ‘한류’(韓流)라는 이름으로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비롯해 방탄소년단(BTS) 등 K-팝 아이돌 그룹 열풍 등에 힘입어 지구촌 한류 팬

최근 한류는 K팝·K드라마 중심에서 웹툰·패션·화장품·먹방(음식을 먹는 방송)·관광 등 일상 영역까지 파고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유튜브·넷플릭스·사회적네트워킹서비스(SNS) 등 한류 콘텐츠의 유통·소비 경로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 것도 한류 바람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도 한류 바람의 한 요인이다. 기생충은 최근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등 각종 해외 영화상을 휩쓸고 있다. 다음 달 9일 열리는 제92회 오스

문화의 힘

카 시상식에서는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미술상, 국제영화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다. 이제 한류는 대한민국의 문화·지식 등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파워의 리더 역할을 할 정도로 공공 외교의 중요한 자산이 됐다. 하지만 자칫 자만에 빠질 경우 한류는 바람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 문화는 상품이다. 향후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위기관리와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국가적 마케팅 등의 전략이 필요할 때다.

/최원철 정치부 부장 cki@



한기민 전남도 재향 경우회장

지난 13일 전 국민의 관심 속에 66년 만에 경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를 마치면 혐의 인정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했다. 이로 인해 경찰에서 ‘혐의 없음’이란 수사 결과를 받더라도 당사자들은 검찰에서 재차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호소하는 등 불평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필자는 이 때문에 현직에 근무할 때 국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보면서 신속한 개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권)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